

경기도 인구변화 영향과 대응

목차

- I. 경기도 인구변화 현황
- II. 인구변화의 영향과 대응
- III. 정책 제언

전세계적으로 '인구절벽'으로 축약되는 빠른 인구구조 변화 진행

- ▶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발생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 시작
 - UN은 세계인구 정점을 2086년으로 예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인구 피크타임보다 약 66년 빠르고, 2070년 인구는 정점의 70% 수준
 - 고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70년 620.6명으로 4.8배 증가 예상

경기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고령화 정도는 상이

- ▶ 경기도 전체 인구는 전국 인구의 26.5%로 2040년까지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자연인구 증가가 아닌 사회적 증가가 원인
 -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2016년~2022년)는 15만 8,400명인 반면,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 7,300명으로 75만 8,900명 차이 발생
 - 경기도 인구변화는 시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역 발생
 - 인구구조 변화의 시기와 강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 정도 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중요
- ▶ 고령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통해 4개 유형 도출
 - 복합형(Max-Max)은 고령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해당
 - 성장형(min-Max)은 고령인구 비율은 낮고 생산가능인구가 높은 유형으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가 해당
 - 정체형(min-min)은 고령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과천시, 김포시, 하남시, 용인시가 해당
 - 위기형(Max-min)은 고령인구는 높으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낮은 지역으로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등 15개 지역이 해당
- ▶ 고령인구는 많으나 노인자원이 부족한 12개 시군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노인 관련 재정 및 인프라 확대 필요

정책 제언

- ▶ 경기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시군별 인구구조 특성에 따른 차등적 복지정책 방향 검토
- ▶ 고령화 급진전 등 인구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I. 경기도 인구 변화 현황

인구구조 변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인구자연감소 시작

전세계적으로 '인구위기', '인구절벽'으로 축약되는 인구구조는 급변하고 있음

- ▶ 인구구조 변화는 전세계적인 아젠더로 대두¹⁾
 -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구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지만 점차 가속화될 사회혁명"이 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UN은 '세계 인구 전망보고서'에서는 출산율 하향 등의 영향으로 2086년 인구의 정점(104억 명)에 도달한 이후 글로벌 총인구의 감소를 예상
- ▶ 우리나라는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²⁾' 현상 발생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³⁾
 - 세계인구 피크타임보다 약 66년 빠른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5,184만 명을 기점으로 2050년에는 4,736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
 - 합계 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전 세계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임
 -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3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이나, 2070년에는 30.7%까지 치솟아 OECD 회원국 중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⁴⁾
 -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고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70년 620.6명으로 4.8배 증가가 예상

〈그림 1〉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1986~2070)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그림 2〉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2023).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 ▶ 인구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연령층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연령층의 인구는 늘어나는 방추형(항아리형)의 양상을 나타냄
 - 전국 및 경기도의 인구피라미드의 모습이 모두 2000년에는 10세 미만과 청장년층인 20~40세의 인구가 많은 별형(도시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2023년에는 50~60세가 가장 많은 반면, 10세 미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바닥이 좁아지는) 방추형(항아리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1) 삼일PwC경영연구소(2023).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삼일회계법인.

2)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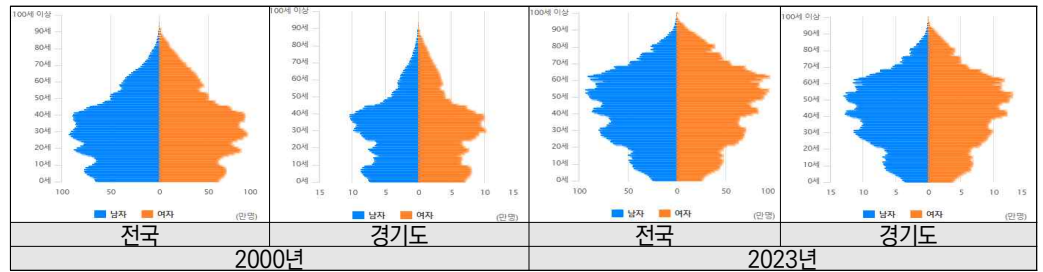
3)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4) 통계청(2023).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통계청 보도자료(2023.6.16.)

I. 경기도 인구 변화 현황

경기도 인구는 양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저연령층은 감소,
고연령층은 증가

〈그림 3〉 인구피라미드 비교(2000년/2023년)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 인구추계피라미드

- ▶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진입하였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고령화 속도는 다르게 진행
 -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율은 1995년에 7.1%를 기록하였으나 수도권은 2005년에 7.3%에 도달
 -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고령 인구는 2020년 기준 172.6만 명 수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

〈표 1〉 수도권 및 전국 고령인구 변화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고령 인구수 (명)	전국	2,162,239	2,640,205	3,371,806	4,365,218	5,424,667	6,569,082	8,205,508
	수도권	699,567	902,933	1,190,963	1,642,175	2,159,722	2,794,103	3,598,468
	비수도권	1,462,672	1,737,272	2,180,843	2,723,043	3,264,945	3,774,979	4,607,040
	경기도	272,951	368,693	519,256	752,603	998,567	1,285,698	1,725,899
	서울시	362,653	431,100	535,053	710,844	928,956	1,202,894	1,472,499
	인천시	63,963	103,140	136,654	178,728	232,199	305,511	400,070
고령화율(%)	전국	5.0	5.9	7.3	9.3	11.3	13.2	16.4
	수도권	3.8	4.5	5.6	7.3	9.2	11.4	14.4
	비수도권	5.9	7.1	8.8	11.2	13.3	14.9	18.3
	경기도	4.4	4.8	5.8	7.3	8.9	10.7	13.3
	서울시	3.4	4.2	5.4	7.3	9.6	12.6	16.0
	인천시	3.5	4.5	5.5	7.1	8.8	10.8	14.1

자료: 박동하 외(2022).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특성연구(Ⅰ)」. 경기연구원.

경기도는 사회적 이동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 경기도 전체 인구는 전국 인구의 26.5%로 2040년까지 지속 증가 예상
 - 2023년 경기도 인구는 1,361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5,140만 명)의 26.5%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1.4배, 부산의 4.1배 규모임⁵⁾
 - 경기도 인구성장률은 2020년 1.5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4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이 예상되며, 자연증가율은 2023년 마이너스 성장(-0.04%)으로 전환해 204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 지속 전망⁶⁾

5) 통계청(2023).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인구수.(2023.5월 기준)

6) 경기도(2022).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I. 경기도 인구 변화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증감과 인구
구조변화는 상이하게
나타남

〈그림 4〉 경기도 인구 성장률

(단위 : %)



자료: 경기도(2022).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 ▶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보다는 타지역에서의 전입 등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
 -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2016년~2022년)는 15만 8,400명이었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 7,300명으로 75만 8,900명 차이 발생
 - 같은 기간 경기도의 유입 인구는 99만 명이었으며, 그 중 서울 77만 명, 대구, 부산, 경북, 경남으로부터 각각 3만 명대의 전입이 발생하였으나, 동일 기간 인구 유출은 7만 명대에 불과
 - 사회적 요인(이동)이 경기도 총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은 경기도 총인구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⁸⁾
 - 최근 10년간 경기도 인구증감의 주된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난 ‘주택’ 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될 경우, 경기도 총인구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구조 현황: 인구증감과 인구구조 변화는 상이

- ▶ 2010년과 비교하여 2023년 10개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21개 시군의 인구는 증가
 - 2010년과 비교하여 2023년 10개 시군이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평균 감소율은 2010년 대비 약 8.2% 수준임
 - 인구감소지역은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성남시, 군포시, 포천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해당
 - 2010년과 비교하여 2023년 21개 시군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가율은 2010년 대비 약 32.4% 수준으로 감소지역의 감소율 대비 약 4배 높게 나타남
 - 인구증가지역 중 10만 명 이상 증가한 시군은 11개로 화성시, 김포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시흥시, 고양시, 수원시가 해당
- ▶ 인구 90만 명 이상의 시군은 2010년에는 3개 지역(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이었으나 2023년에는 5개 지역(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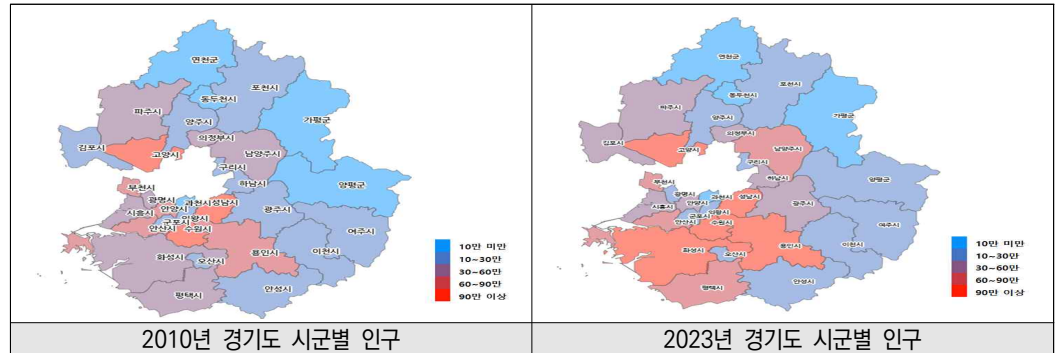
7) 경기도(2022).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8) 김성하 외(2023). 「사라지는 지방, 지역활력에서 답을 찾다!」. 경기연구원.

I. 경기도 인구 변화 현황

경기도 전체인구의
증가에도 시군별로는
고령화에 기인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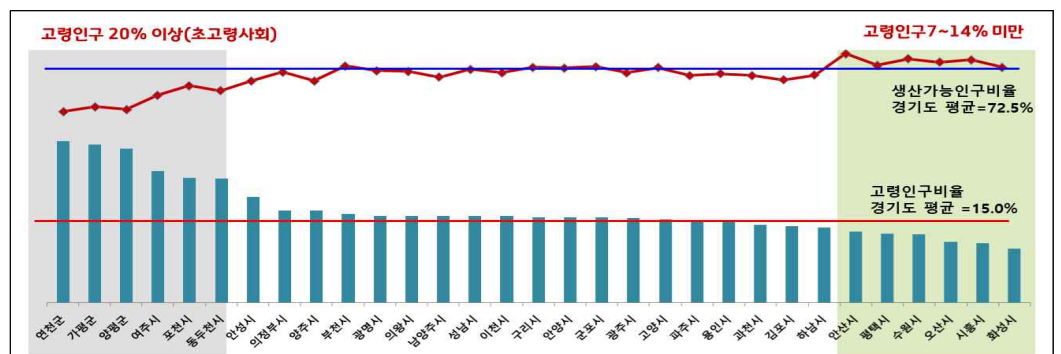
〈그림 5〉 경기도 시군별 인구변화(2010년 vs 2023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토대로 재구성

- ▶ 경기도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외곽(C벨트)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 등장)
 - 소멸위험 지수¹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평군(0.2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천군(0.29), 양평군(0.30), 여주시(0.40), 포천시(0.44), 동두천시(0.48) 순으로 6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2022.3월 기준)¹¹⁾
- ▶ 고령인구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낮고, 반대의 경우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반비례함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 지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고령인구 비율이 경기도 평균과 편차가 큰 안산시, 평택시, 수원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등은 고령인구 14% 미만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높게 나타남

〈그림 6〉 경기도 시군별 고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비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토대로 재구성(23. 4월 기준)

- ▶ 경기도 인구변화는 시군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역 발생

9) 이상대(2021).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가평군을 사례로」. 경기연구원.

10)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를 의미하며 소멸위험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0.2 미만이면 '고위험', 0.2 이상~0.5 미만이면 '위험', 0.5 이상~1.0 미만이면 '주의', 1.0이상 ~ 1.5 미만이면 '보통', 1.5 이상이면 '매우 낮음'으로 구분

11) 김성하 외(2023). 「사라지는 지방, 지역활력에서 답을 찾다」. 경기연구원.

II. 인구변화의 영향과 대응

인구변화는 지방 및 국가기능 유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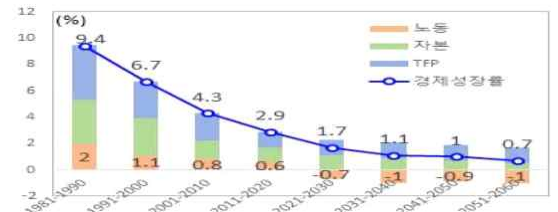
인구구조변화는 경제 성장둔화, 인플레이션, 재정 여건 악화 등 지방 및 국가 기능 유지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와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2021년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 촉진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67년에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고령인구 수보다 적은 수준으로 노동공급 감소가 예상¹²⁾

- 생산연령인구는 2021년 3,713.3만 명이었으나 2067년 1,784.2만 명으로 감소 전망

〈그림 7〉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 축소사회의 본격적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비효율 발생

- 인구증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절대인구의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거칠 우려
 - 학령인구와 병역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교육·병역 제도의 정합성이 급격히 저하
- 가족 구성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도 빠르게 바뀌는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 진행

▶ 차별적인 인구집중현상 발생으로 수도권 과밀혼잡, 비수도권 경쟁력 상실 초래

-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로 비수도권은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됨
- 지역 내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
- 지역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지역¹³⁾이 2021년 기준 108개로 전체 시군구의 48%에 육박하는 등 지역소멸위험도 확산

▶ 고령화로 인해 부양부담과 건강권 보장요구가 급증함

-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노년부양비는 연금과 의료 수요로 이어져 복지 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미래세대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¹⁴⁾
 - 4대 공적연금의 2040년 적자 전환, 건강보험 2024년 적립금 소진 등 재정건전성 악화, 세대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¹⁵⁾
-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 및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가 확대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12) 관계부처합동(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13) 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 0.5 미만 지역

14) 성창훈(2022).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KDI 경제정보센터.

15) 관계부처합동(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II. 인구변화의 영향과 대응

인구구조변화가
사회구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 '23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4%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5년 20%, '35년 30%, '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7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 예상¹⁶⁾
- 기대수명-건강수명 차이는 2000년에 7.9세, 2010년 8.8세, 2016년 9.4세로 증가

인구 고령화 시대 대응과 인구변화가 사회구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정책을 추진 중

- ▶ 고령화로 집약되는 인구변화가 보건복지 영역에 주는 영향력은 다른 사회 영역보다 더 현저할 것으로 예상
- 고령화 문제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요구됨

〈표 2〉 인구변화에 따른 보건복지영역에서의 주요 이슈

구분	정책 이슈
복지영역	- 돌봄 및 요양 필요도 증가 - 건강보험 수입원 및 지출 변화
연금 및 소득보장영역	- 노후 빈곤 위험 증가 - 연금 재정의 악화
사회서비스영역	- 돌봄 욕구 증가 - 새로운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대두 -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사회보장재정영역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전략 마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미래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 ▶ 중앙정부는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방안 구축을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주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3차례에 걸쳐 수립함
- 2010년 초반 소폭 상승했던 합계출산율이 다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저출산 분야”에 중점을 두던 전략을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사업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경기도 뿐 아니라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화에 따른 인구정책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¹⁷⁾
-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6) 관계부처합동(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17) 노경혜·유혜인(2022).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정책 현황과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II. 인구변화의 영향과 대응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고령화를 전제로 한
“적응”전략을 고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수이므로 고령화를 전제로 한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 전략 필요¹⁸⁾

- ▶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양(量)에만 집중하는 인구정책이 아닌 인구 규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사회경제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의 전환 필요
- ▶ 2021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경기도 돌봄 이용경험률은 10%대로 낮으나, 향후 이용의향은 50% 내외로 나타나 잠재적 돌봄욕구가 있음을 예상¹⁹⁾
 - 노인돌봄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돌봄비용지원서비스가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상황 대처서비스(12.3%), 가사지원서비스(11.6%)순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향은 응급상황 대처서비스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지원서비스(50.8%), 이동 및 외출지원서비스(47.5%)순으로 나타남

〈그림 8〉 경기도 노인돌봄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단위 : %)



자료: 유병선 외(2021).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토대로 재구성

인구감소·고령화에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해 경기도 시군을 4개 유형으로 분류²⁰⁾ 하고 자원현황을 분석

- ▶ 인구구조 변화의 시기와 강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화
 - 복합형(Max-Max)은 고령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모두 경기도 평균대비 높은 유형으로 주로 도시형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가 해당됨(6개 지역)

18) 민보경(2021). 「인구축적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 국회미래연구원.

19) 유병선 외(2021).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경기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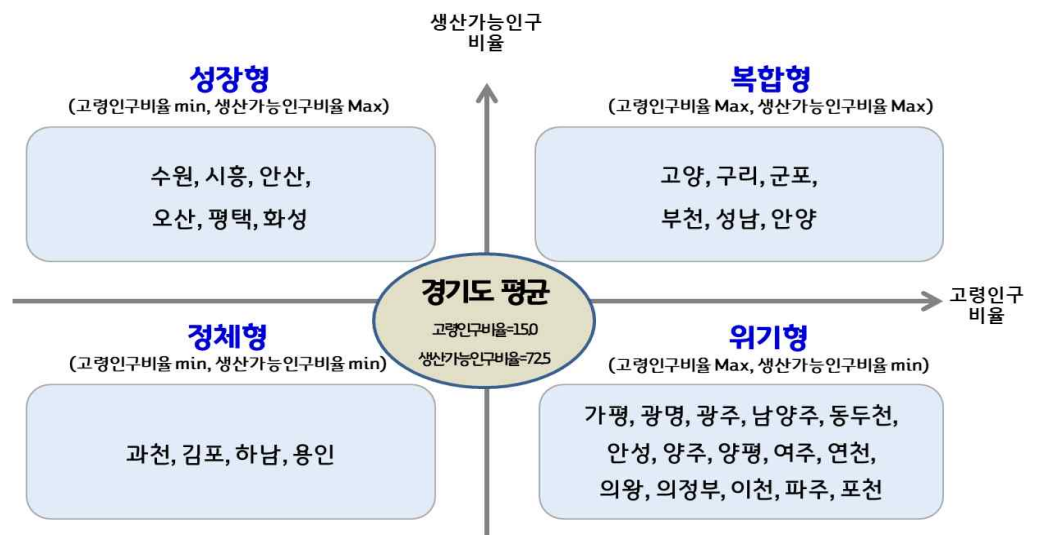
20) 단순기준적용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시군의 고유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II. 인구변화의 영향과 대응

인구 지표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
복지자원 현황을 분석

- 성장형(min-Max)은 경기도 평균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낮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높은 유형임. 주로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신도시 등으로 인해 젊은층이 많이 유입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가 해당함(6개 지역)
- 정체형(min-min)은 고령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모두 경기도 평균대비 낮은 유형으로 과천시, 김포시, 하남시, 용인시가 해당됨(4개 지역)
- 위기형(Max-min)은 경기도 평균대비 고령인구는 높으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낮은 유형임. 농촌형과 도농복합형 지역이 주로 포함되며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등 15개 지역이 해당. 위기형에 속한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소멸지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므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음

〈그림 9〉 고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비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원자료 기준으로 연구자 재구성(23. 4월 기준)

▶ 노인자원은 타 복지시설보다 절대적으로는 많으나 고령인구 대비 전체적으로 부족

- 전체 경기도 복지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아동 대상 시설이 많고, 재정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과 노인 대상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임²¹⁾
-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복합형(Max-Max)과 위기형(Max-min) 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해당되며, 위기형의 9개 시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노인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모두 높은 복합형(Max-Max) 지역은 도시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노인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²²⁾

21) 성은미(2022). 「2022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경기복지재단.

22) 노인자원현황과 고령인구 비율과 비교하여 고령인구대비 자원현황을 비교

II. 인구변화의 영향과 대응

고령인구 대비 노인자원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재정 및 인프라 확대 필요

- 고령인구는 높으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낮은 위기형(Max-min) 지역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은 높는데 비해 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의왕시가 노인자원의 부족이 나타남. 특히 동 연구에서 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의 경우 노인자원뿐 아니라 전반적 자원부족군으로 나타나 적극적 복지 자원 확대가 필요
- 그러나 고령인구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기진입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자원이 확충된 것으로 나타남
- 성장형(min-Max)과 정체형(min-min)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지역 중 시흥시와 오산시를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노인자원이 부족
-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증가지역인 성장형의 경우 인구증가에 맞춰 노인자원의 확충이 필요

〈표 3〉 인구유형별 노인자원 유형

유형	시군명	고령인구 비율	노인자원 부족정도	시군명	고령인구 비율	노인자원 부족정도
복합형 (Max-Max)	고양시	○	●	부천시	○	◎
	구리시	○	◎	성남시	○	●
	군포시	○	●	안양시	○	●
위기형 (Max-min)	광주시	○	●	연천군	●	
	남양주시	○	◎	포천시	◎	
	의정부시	○	◎	광명시	○	◎
	파주시	○	○	안성시	○	
	가평군	●		양평군	●	
	동두천시	◎		의왕시	○	◎
	양주시	○		이천시	○	
	여주시	◎				
성장형 (min-Max)	수원시		◎	시흥시		
	평택시		○	화성시		○
	안산시		◎	오산시		
정체형 (min-min)	김포시		○	과천시		◎
	하남시		●	용인시		◎

자료: 성은미(2022). 「2022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토대로 재구성

주1) ○은 전체 시설, 이용시설, 복지재정 중 1개 항목에서, ◎은 2개 항목에서, ●은 3개 이상 항목에서 표준화상이점수가 음수(-)

주2) 노인인구비율을 4단계로 균등 구분하여 나타냄

▶ 고령인구가 많으나 노인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관련 재정 및 인프라 확대 필요

- 고령인구가 많으나 노인복지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12개 시군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노인 관련 재정 및 인프라 확대 검토 필요함
 -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의왕시가 해당
-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곳은 지역의 노인자원의 질적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접근성(이동권리)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차등적 복지정책 검토 및 인구예측의 불확실성 최소화

경기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현재의 장려금 지급 등 단기적 정책은 실효성 및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구의 정주를 유인할 수 일자리, 문화 등 인프라 확보 정책 추진
- ▶ 자연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유입책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방안 강구

시군별 인구구조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정책 방향 검토

- ▶ 고령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복지정책 대안 마련 필요
 - 고령인구 집중지역(복합형, 위기형)은 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의 체계 형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향상에 대한 정책 추진
 - 사회적 인구이동이 높은 지역(성장형) 보편적 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 확대, 서비스 다양성 고려한 정책 추진
 - 정체형(min-min)지역은 전반 복지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필요

고령화 급진전 등 인구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 인구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DB구축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측으로 예방적, 선제적 대응 위한 시스템 구축
 -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간극을 완화시키는 것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책무이므로 정확한 예측체계 마련
 -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적시성, 자원 활용의 효율성, 대상자의 정책 실효성 증대 등을 위한 시군단위의 인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실효성 확보
 - 경기도는 도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21년~)를 추진중
 - 기소멸단계에 진입한 시군은 인구관련 문제가 가치지향적이 아닌 존립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구영향평가는 예산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성, 실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개선
- ▶ 인구정책과 사회보장 정책간 제도적 상호연계성 강화
 - 인구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및 정확한 인구추계를 통한 선제적 사회보장 정책 수립 필요